

격전지 사전투표율 ↑ ...민주 vs 非민주 누가 웃을까

㉠ 6·3 지방선거 D-2

전남 38.95% 1위...전국 평균 23.51%
신안 61.31% 최고...8개군 50% 돌파
광주 27.83% 3위 동구 32.19% 기록
단체장 접전지 중심 투표 열기 후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에서 광주·전남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투표율을 기록하며 최종 선거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2·3·4·6면

이번 선거는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인 만큼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데다, 일부 기초단체장 선거구의 경우 치열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핵심 지지층 결집 효과까지 더해져 사전투표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남에서는 신안·진도·함평·강진·담양·구례·곡성·장흥 등 8개 군(郡)의 사전투표율이 50%를 돌파하며 전국 최고 수준의 투표 참여 열기를 보였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율 집계 결과, 전남·광주 유권자 274만7천75명 가운데 93만7천9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최종 사전투표율 34.14%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23.51%보다 10.63%p 높은 수치다.

전남지역 사전투표율은 38.95%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으며, 광주지역은 27.83%



소중한 한 표 행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지난 30일 오후 광주 남구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 지하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광주의 경우 2022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17.28%보다 10.55%p, 2018년 지방선거 23.65%보다 4.18%p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32.19%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구 29.70%, 북구 28.68%, 서구 27.82%, 광산구 24.64% 순이다.

동구는 원도심 특성상 상대적으로 고령층 비중이 높은 데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조국혁신당 후보 간 맞대결 구도가 형성돼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광산구는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함께 치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전남에서는 기초단체장 선거 경쟁이 치열한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신안군이 61.31%로 가장 높았다. 진도군 55.03%, 함평군 54.21%, 강진군 52.16%, 담양군 51.89%, 장흥군 50.71%, 구례군 50.44%, 곡성군 50.34% 등 8개 군의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서었다. 이들 지역은 민주당 후보와 비민주 진영 후보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된 기초단체장 격전지로 분류된다.

강진·함평·진도·신안 등은 지역 기반이 강한

후보 간 대결, 무소속 후보 도전, 공천 갈등 여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유권자 결집력이 높아진 곳으로 꼽힌다.

담양과 곡성 역시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후보 간 3자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다.

반면, 목포 33.55%, 여수 29.65%, 순천 33.05%, 광양 33.05% 등 시(市) 단위 도시권의 사전투표율은 전남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광주의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우세 구도와 일부 선거구 무

투표 당선 등의 영향으로 상승 폭이 제한된 반면, 전남은 기초단체장 선거 격전지가 많아 '사전투표율 전국 1위'를 기록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사전투표율 상승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한 관심과 기초단체장 선거 경쟁 구도가 함께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며 "전남 기초단체장 격전지가 적지 않은 만큼 본투표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높은 투표 열기가 본투표까지 이어질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변은진 기자

막판까지 혼탁한 地選...고소·고발 난무

전남 지자체장 후보 중심 흠집내기
순천·무안·해남 후보·캠프 강제수사
정책 실종 네거티브戰...유권자 피로

6·3 지방선거 막판까지 광주·전남에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며 혼탁한 선거 양상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 경쟁은 뒷전이 되고 흠집내기 일색의 '네거티브 전략'에 유권자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선거 이후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3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종원 담양군수 후보를 상대로 최근 일련 전 조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는 전남도의원 신분이었던 지난해 말 담양군 한 클럽방에서 주민들에게 현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정철원 담양군수 후보 측은 성인을 상대로 한 금품 제공으로 규정하며 맹공을 펼쳐왔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해 온 박 후보 측은 정 후보가 건설사를 차명으로 운영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전남경찰청은 정 후보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민주당 전남도당으로부터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일부 지역에선 경찰의 강제수사까지 이뤄졌다. 최근 전남경찰청은 3선에 도전하는 명현관 해남군수가 행정 당국을 치적 홍보에 동원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군청 총무과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또 전남경찰청은 이날 초 민주당 순천호순천시장 후보 선거캠프에서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직 관

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무안경찰도 지난 달 중순께 무안군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당시 압수수색은 현직인 민주당 김산 후보가 출마 선언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었다.

이 밖에도 장성, 완도, 영광, 영암 등지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수수 의혹 등 각종 선거법 위반 관련 고소·고발이 잇따랐고, 광주에서도 구정장 후보가 당내 경선에 앞서 지난해 1월 불법 권리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거 때마다 네거티브가 활개치긴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특히 심한 것 같다"며 "당선과 무관하게 사법리스크가 있는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유

권자들에게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계자는 "도덕성 검증 역시 중요한 절차지만 '파괴식'의 공방은 유권자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선거를 외면하게 하는 구태 정치"라며 "후보가 스스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우선해서 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재영 기자

Today

합계출산율 1위...전남 출산정책 '주효' 2면
기후위기시대, 인간·자연 공존을 묻다 15면
KIA, 충격의 스윙패...'해결사가 없었다' 16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 투표로 만듭니다

- 1차 투표용지 받음
-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거나 날인 또는 손도장)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음
- 2차 투표용지 받음
- 투표지 받음
- 투표지 받음
- 투표지 받음

선거일 투표 안내

일시
6월 3일(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장소
지정된 투표소
거주지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위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나, 화면캡처 등 저장 이미지 사용 불가)

자세한 선거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nec.go.kr)에서 확인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투표 시 한영의 후보자에게만 기표(두 명 이상에게 기표시 무효)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안 됩니다.
•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